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Basic Income Experiments in Selected Countries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7년을 지나면서 기본소득 실험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현재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코틀랜드, 미국,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 기본소득 실험 설계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곧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실험들 중 서로 간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실험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고찰이 우리나라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기본소득 실험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나미비아는 2008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1.5~2%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기본소득 수급자들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기본소득 금액을 제외하고도 29%나 증가하였다(Basic Income Coalition, 2009). 인도는 2011년에 두 곳의 마을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1인당 GDP 3%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대조 마을에 비해 실험 마을의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건강이 개선되고, 학업 성적이 오르며, 부채가 감소하고, 마을의 자발적 공공재 공급이 늘어나며, 여성의 권한이 증가했다(Sewa Bharat, 2014).

2017년을 지나면서 기본소득 실험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현재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코틀랜드, 미국,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 기본소득 실험 설계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곧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실험들 중 서로 간 뚜렷하게 구분되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실험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각국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 측정 변수, 이론적 특징,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 한다. 제2절에서는 세 가지 실험을 비교하고, 제3절에서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기본소득의 특징에 비추어 각 실험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끝으로 제4절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우리나라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서술한다.

2. 세 가지 실험 비교

가. 핀란드 정부의 실험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던 2000명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월 560유로를 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실험 기간 중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실험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Kela, 2017). 첫째,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변화하는 노동의 성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사람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고 보다 강한 노동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 셋째,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복잡한 급여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을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삼았다. 핵심적인 측정 변수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기본소득 수급자 간 고용률의 차이이다.

일부 사람들은 핀란드 실험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장청(Kela)은 지금 진행 중인 실험이 분명히 기본소득 실험이며, 이것이 실험인 만큼 일부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면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면, 굳이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고, 정액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에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한 나라다. 그러나 최근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불안정한 노동이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로서 청년 실업률을 보면, 2016년 19.88%로서 OECD 평균 12.9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OECD, 2018). 실업자가 되면 수당을 주고, 취업을 하면 수당을 끊는 제도하에서 노동 유인이 현저히 감소한다. 일을 하나 안 하나 소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복지국가를 수립할 때부터 존재했으나, 완전고용 시대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3% 내외의 실업자에게 노동 유인이 없다고 해서 경제에 의미 있는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실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를 별도로 모집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연소득이 미혼인 경우 3만 4000달러 이하, 결혼한 경우 4만 8000달러 이하인 사람들이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에게 미혼인 경우 1만 7000달러, 결혼한 경우 2만 4000달러를 지급하되 시장소득이 생길 경우 시장소득의 50%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형태이다.

주정부는 실험의 목적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과 싸우는 새로운 방법의 모색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 안정적 공급, 스트레스·불안, 정신 건강, 건강 및 건강보험 사용, 주거 안정, 교육·훈련, 고용·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변수들이 측정된다(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2017). 측정 항목 중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제일 먼저 나오고 노동 유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흥미롭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핀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고, 실험이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면 합리

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소득세는 좁은 의미에서는 기본소득이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소득보장 정책에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가 미국과 캐나다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다수 견해이다. 부의 소득세는 한편으로 세금을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정책과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에 비해 명목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지만, 소득을 속일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크고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캐나다는 무상의료와 기본소득에 가까운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를 상당히 갖춘 나라이지만 핀란드 정도로 복지가 성숙한 나라는 아니다. 최근 고용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자가 겪는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빈곤은 2008년 온타리오주의 경제적 산출을 5.5% 감소시켰고, 매년 322억 달러에서 383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Segal, 2016, p. 18). 빈곤과의 싸움을 위해 복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낙인효과가 큰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포착률이 떨어지고, 낙인효과가 작은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 유인이 줄어든다. 낙인효과가 없으면서도 노동 유인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이다. 무상의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빈곤층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미국 와이콤비네이터의 실험

미국 민간 기업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샘 올트먼(Sam Altman)은 미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하고 있다.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 실험이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본 실험이 시작될 것이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을 선발해 조건 없이 매월 1000달러를 3년 내지 5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이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과 함께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실험의 측정 변수는 다른 나라의 실험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 첫째 변수는 시간 사용의 변화(기본소득이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고 둘째 변수는 주관적인 행복과 객관적인 건강이며, 셋째 금융 건강, 넷째 시간 선호와 위험 선호(기본소득

이 장기적이고 위험한 투자를 수용하도록 이끄는가?), 다섯째 정치적·사회적 행동과 태도, 여섯째 범죄, 일곱째 아이들에 대한 영향, 여덟째 가정을 넘어선 외부효과 및 네트워크 효과다(Y Combinator Research, 2017, pp. 6-7).

올트먼의 실험은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기간, 측정 변수 등 모든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의 배경은 빈곤의 증가, 소득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안정화, 중산층 축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등이다. 와이콤비네이터의 연구진은 미국에서 월소득 변동 폭이 30%가 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5%나 된다는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Y Combinator Research, 2017, p. 5).

와이콤비네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15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한 세계 최고의 액셀러레이터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는 800억 달러 이상이다. 에어비앤비(Airbnb), 레딧(Reddit), 드롭박스(Dropbox)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와이콤비네이터에 의해 육성되었다(Y Combinator 홈페이지). 올트먼은 스타트렉의 팬으로서 과학기술 유토피아를 꿈꾸며 자라났다. 인공지능에도 투자하고 있는 그에게는 기술 발전이 미래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는 모험적인 창업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혁신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이를 사용할 것이다(Spectacle, 2018). 과학기술의 발전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와이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을 지배하고 있다.

3. 실험의 의의와 한계

세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은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늘어났다. 그런데 기존의 실업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 유인을 없애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 경제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없다. 둘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규직 중심의 근로자

복지제도를 가지고서는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셋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넘어 지식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상실돼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세 가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은 일을 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에도 지급되므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노동 유인을 없애지 않는다. 둘째, 소득에 비례한 세금을 거둬들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 주면, 결국 상위 근로자는 순납세자가 되고 중하위 근로자는 순수혜자가 된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효율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면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공유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자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나누어 소유하는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자산소유 분산에 기여하게 된다.

세 나라의 실험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통의 맥락 속에서 각각 자기 나라에 더 시급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나라의 실험은 기본소득의 이러한 특징 중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핀란드는 이미 복지제도가 성숙한 나라이므로 복지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과제이다. 캐나다는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제이다. 미국은 과학 기술 발전이 가장 앞선 나라로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 가장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놓고먹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특히 핀란드의 실험은 노동 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인한 노동 유인의 감소는 아무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몰라도,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업수당의 한계세율은 100% 이상이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한계세율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계세율을 낮추는 정책이 노동 유인을 감소시킬 것인지 증가시킬 것인지를 굳이 실험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반대 논리는 기본소득제도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빈곤이 감소하면서 더 건강해지고, 시간을 보람 있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더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물론 재원 마련의 관점에서 보면 핀란드나 미국의 실험보다 캐나다의 실험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의 소득세 형태는 필요 재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부의 소득세 형태의 기본소득제도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민약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서 동시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실험까지 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다. 실험이 끝나고 동시에 그 방안대로 재원을 마련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표 1.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정책	기본소득			
	A	B	C	계
사람				
시장소득	0	200	800	1000
기본소득	30	30	30	90
세금	0	18	72	90
순수혜	30	12	-42	0

A, B, C 세 사람이 있고, 이들의 시장소득이 각각 0원, 2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세 사람에게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총 9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9%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B의 납세액은 18만 원이고, C의 납세액은 72만 원이 된다. 이때 각 사람의 순수혜(기본소득 - 세금)를 계산하면, 제일 마지막 행과 같이 A는 30만 원, B는 12만 원, C는 -42만 원이 된다. 이로부터 기본소득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도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명목 금액은 90만 원이지만 실제로 재분배에 사용되는 금액은 42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소득세는 순수혜만큼의 금액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걷거나 주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를 위해서는 42만 원의 재원만 필요하다. 그러나 부의 소득세는 매월 소득조사를 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는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행정비용이 적게 들지만 정치적 저항이 크고, 부의 소득세는 명목 금액이 적어서 정치적 저항이 적지만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제 실험 대상자가 되면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받지만 9%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실험을 설계해 보자. A와 B는 기꺼이 실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바람직한 효과가 드러난다면 3분의 2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납부하는 데 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실험과는 조금 다르게, 실험 대상자가 되면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받지만 자발적으로 몇 %의 소득세를 추가로 낼 것인지 적어 내도록 실험을 설계할 수도 있다. B는 최대 15%까지의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¹⁾

실험을 이렇게 설계했더라면 기본소득의 효과와 더불어 재원 마련 방안까지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세 나라의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요소가 빠져 있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도 핀란드, 캐나다, 미국과 동일한 시대적 과제, 즉 기술혁신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실업률은 10%,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임금 격차가 매우 크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격차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격차를 줄일 정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은 가장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나라이다. 사회가 살아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태어날 사람도 죽이는 나라이다. 복지국가가 되어야만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 살인을 멈출 수 있다.

1)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강수와 강남훈(2017)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보유세로 30조원, 환경세로 30조원을 걷고, 가계본원소득의 10%를 시민세로 걷을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 때 전체 가구의 83%가 순수혜 가구가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만들기 싫어서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왜 복지국가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복지국가를 만들 방법은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복지국가에 필요한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왜 세금을 내기 싫어할까? 정치와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금을 낭비하고, 세금을 떼어먹은 정치인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복지를 제대로 경험한 적도 없으니 세금을 내는 것을 더욱 싫어한다. 복지 무경험과 정부 불신,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만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

기본소득은 시대적 과제와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과제, 즉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지닌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확인하는 실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은 다른 나라의 실험과 매우 다른 실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여금(세금)을 내는 실험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여금 중에서도 특히 자산에 기초한 기여금을 내는 실험이 되어야 한다. 셋째, 비경제활동인구 이외에도 일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 농민 등 비교적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실험이 되어야 한다.

실험을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기본소득이 복지 무경험과 정부 불신을 극복하고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자산 불평등과 노동 불평등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전강수, 강남훈. (2017).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 등장 배경, 도입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 역사비평. 120.
- Basic Income Coalition. (2019). Making the difference! The BIG in Namibia.
- Kela. (2017). Objectives and implementation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http://www.kela.fi/web/en/basic-income-objectives-and-implementation>에서 2018. 2. 20. 인출.
- OECD. (2018). Youth un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c3634df7-en에서 2018. 3. 26. 인출.
- 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2017). Ministers' message: Testing new ways to provide income support and fight poverty. <http://www.ontario.ca/page/basic-income-consultations-what-we-heard>에서 2018. 2. 20. 인출.
- Segal, D. Hugh. (2016). Finding a Better Way: 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or Ontario. Massey College.
- SEWA Bharat. (2014). A Little More, How Much It Is.... Unicef.
- Spectacle. (2018). The Great American Share. <https://spectacle.com/001/sam-altman-interview-universal-basic-income>에서 2018. 03. 28. 인출.
- Y Combinator 홈페이지. <http://www.ycombinator.com>에서 2018. 2. 20. 인출.
- Y Combinator Research. (2017). Basic Income Project Proposal - Overview for comments and Feedback.